민주, 광주 진흙탕 싸움에 전국 민심 잃을라 '고심'

광주시장 후보 과열 경쟁에 조기 경선·전략공천 논의

'당원명부 유출' 법적 다툼 등에 1순위 지역 꼽혀
가능한 빨리 경선 치러 '내상' 최소화해야 판단한 듯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 및 조기경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러한 과열 분위기를 잠 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된다.

당내 후보들의 난립과 경쟁이 법적다툼을 비롯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칫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정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마예정자들 간 충돌이 단순히 신경전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극도의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가능하면 빨리 경선을 치러 '내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춘석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총장은 "내부 단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경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개인적 의견일 수 있지만, 조기경선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광주의 경우 경선 과열로 인한 전략공천 또는 조기경선 대상지역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바른미래당, 민평당의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낮으면서 '민주당 경선 통과는 곧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대통령 격려' 발언 등으로 당내 후보자 간 신경전이 검·경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심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집안 싸움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비공개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전략공천 카드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 뛰어든 7명을 모두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안과, 당원명부 유출과 '대통령 격려'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킨 일부 주자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후보들로만 경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역대 선거에서 일방적인 전략공천으로 민심을 잃는 부작용을 여러차례 겪은 경험이 있어 쉽게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큰 전략공천 보다는 조기경선을 통해 경선 후보 간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부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고발과 경찰·검찰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용섭 예비후보의 일자리위 부위원장직 조기 사퇴 논란과 대통령 격려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 일정과 경선 로드맵 등을 감안할 때 조기경선까지는 짧아도 30~4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경선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권리당원 명부확정과 최고위원회 인준 등의 절차를 고려해도 가장 빠른 경선은 4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여론이 높은데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다보니 후보들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중앙당에서 확정적으로 전략공천이나 조기공천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지만, 후보들 간 과열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간 분란보다는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한 '우회적 압박'으로 전략공천 카드가 흘러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이 의원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 최권일기자 cki@

김정숙 여사·이방카 평창올림픽 관람 중 셀카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장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미국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 24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센터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선 경기 관람 중 함께 사진을 찍고 /연합뉴스

민평·바른미래당, 호남 광역단체장 현역 차출 고민

"당 중진의원 나서야"
"의석수 감소에 부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아직 내세우지 못하면서 과연 민주당에 맞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에 중진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의석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다 저조한 당 지지율로 선뜻 나서는 현역 의원도 없는 상황이다.

25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호남의 적통을 내세우는 민평당의 고민이 깊다. 조배숙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현역의원을 차출해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18일에는 "너무 와전됐던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실제 검토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이 대통령과 여당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평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평당은 14석 규모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 한 데다 의석 하나하나가 원내 영향력의 크기와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을 차출하기에는 부담이 커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천정배·장병완·김경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다. 전남지사로는 박지원 의원이 꼽히고 있지만 부인이 투병중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지사 후보로는 정동영 의원과 조배숙 대표, 유성엽 의원 등이 꼽히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전국적으로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주당과의 적절한 전략적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단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정당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 찾기는 쉽지 않다. 광주시장 후보로는 대표를 맡은 박주선 의원과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내 요직을 맡은 만큼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광주시장 출마에 부정적이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주승용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과연 그가 사지로 뛰어들 용기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지사 후보로는 김관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장 후보에 권은희 의원, 전북지사 후보에 김관영 의원 등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선다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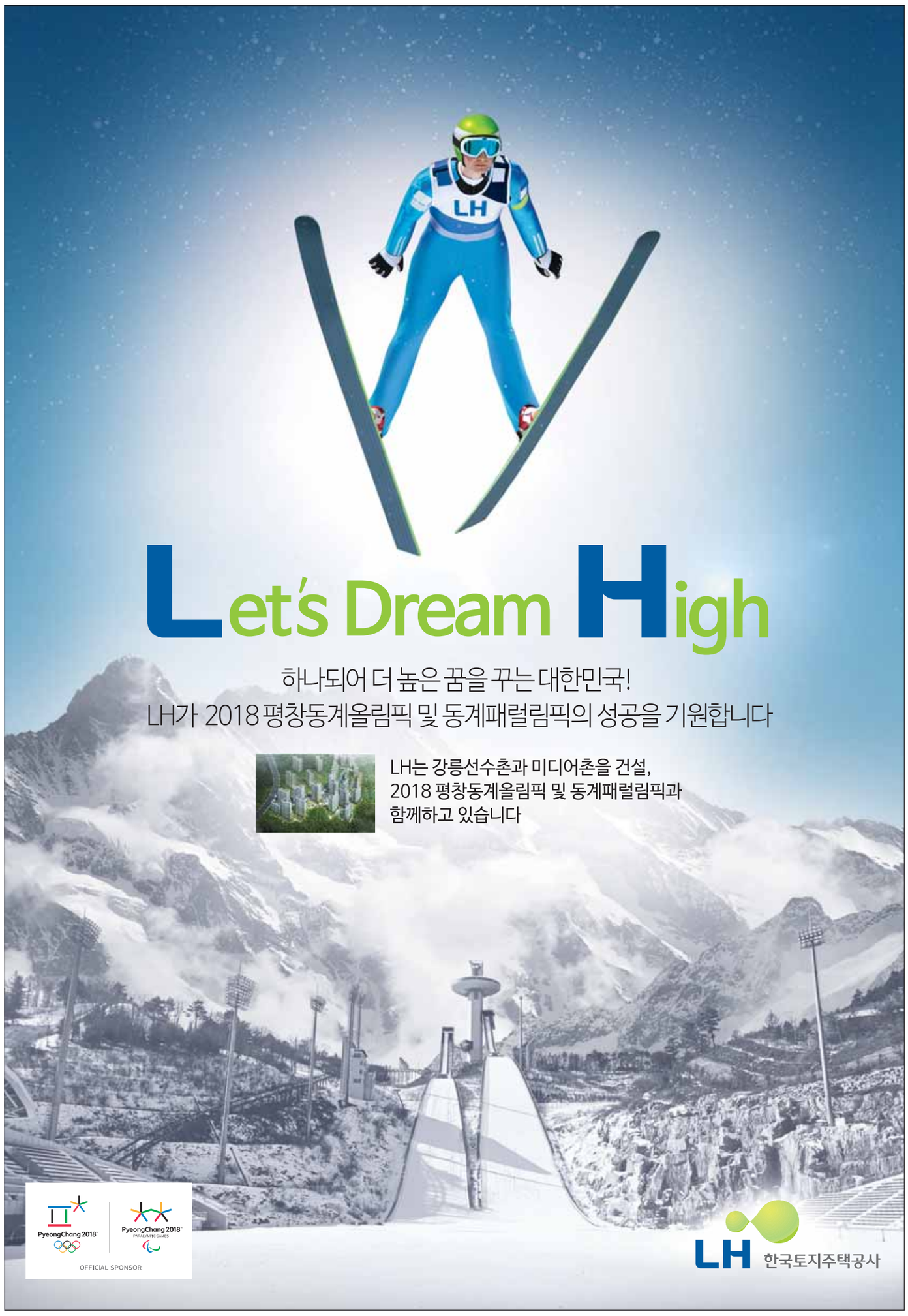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민평당과 공동 교섭단체 받을까 말까

이정미 대표 "제안 있으면 검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이 합산 의석 20석을 넘겨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양당 모두 원내 존재감이 커지면서 국회 운영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은 일단 대외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25일 "의원 몇 명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의제로 올려 심각하게 토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민평당의 공식 제안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6석)이 우선 민평당(14석)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헌법개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진보적 당원들이 대부분인 정의당 내에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가 불협화음을 낸 끝에 금세 무너진 전례를 들어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민평당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으로 남은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민평당에 합류할 수 있고, 민평당을 지지하면서도 바른미래당에 묶여 있는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향후 강제 출당돼 민평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민평당이 당분간은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